2027학년도 서강대학교

모의논술 자료집

- 인문계열 -

서강대학교 입학처

목 차

☐ 문제 및 제시문 1

☐ 출제의도 및 채점기준 3

■ **유의사항**
1. 시험시간은 50분입니다.
2. 답안 분량은 800~1,000자입니다.

문제

제시문 [가]의 두 지문에 입각하여 [나], [다]의 갈등을 논하고 [라], [마]를 바탕으로 문제 해결의 대안적 방향을 논술하시오.

제시문

[가-1] 정의의 종류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정의는 무엇보다 부나 권력 등의 사회적 자원을 구성원들에게 어떻게 나누어 주어야 하는가 하는 분배적 정의를 뜻한다. 분배적 정의에 따르면, 같은 자격을 가진 사람들이 동등하지 못한 몫을 분배받거나 자격이 다른 사람들이 동등한 몫을 분배받는 것은 공정하지 못한 것이다. 즉, 각자에게 정당한 몫이 주어져야 분배적 정의에 부합한다. 만일 분배가 공정하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사회 구성원들이 불만을 갖게 되어 사회 갈등과 대립이 발생할 수 있다. […] 사회적 자원을 공정하게 분배하려면 구성원 간에 합의가 필요하다. 사회에서 주로 적용되는 분배 기준으로는 필요, 능력, 업적 등이 있다.

—『고등학교 통합사회』 교과서(재구성)

[가-2] 법이 실현하고자 하는 최고의 이념은 정의이다. 일반적으로 정의를 설명할 때에는 '옳다', '공평하다', '공정하다' 등과 같은 말들을 주로 사용하지만, 시대와 사회에 따라 옳음, 공정성, 공평성 등은 다르게 규정되므로 정의가 무엇이라고 단언하기는 쉽지 않다. 하지만 법적 정의를 이야기할 때 정의의 본질을 평등이라고 보는 데에는 큰 이견이 없다. 평등을 바탕으로 한 정의는 크게 평균적 정의와 배분적 정의로 나눌 수 있다. 평균적 정의는 교환적·보상적·산술적 의미의 정의이다. 이는 차이를 고려하지 않고 누구에게나 똑같이 대우해 주는 형식적 평등을 통해 실현된다. 이와 달리 배분적 정의는 상대적·비례적·실질적 평등을 추구하는 정의이다. 이는 개인의 능력과 상황, 필요 등에 따른 차이를 반영하여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 대우하는 것을 말한다.

—『고등학교 정치와 법』 교과서

[나] 기후 변화는 대기 중의 온실가스 농도가 증가하여 지구가 온난화되면서 발생한다. 기후 변화는 가뭄, 홍수, 태풍 등과 같은 재해를 증가시키고, 물 부족, 사막화, 질병의 증가, 작물 생산의 감소는 물론, 해수면 상승과 같은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이러한 기후 변화의 심각성이 대두되면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국제적인 노력이 시작되었다. 1992년에 온실가스의 배출을 규제하기 위해 기후 변화 협약이 채택되었고, 2005년에는 교토 의정서를 발효하였다. 교토 의정서는 '탄소 배출권 거래제'를 통해 이산화탄소와 같은 온실가스 배출량을 나라별로 할당한 후, 그 배출권을 사고팔 수 있도록 하는 국제 협약이다. 그런데 이와 관련하여 논란이 일었다. 무엇보다 (오염배출권을 거래할 수 있게 되면) 기후 변화에 책임이 큰 선진국들에 도덕적 면

죄부를 줌으로써 근본적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비판이었다.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국가 간의 이해관계 대립
개발도상국 A: 기후 변화 문제는 먼저 산업 개발을 이룩한 선진국들이 더 많은 책임을 져야 합니다.
선진국 B: 개발도상국들이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산업화와 개발이 지구 온난화를 더욱 악화시키고 있습니다.

—『고등학교 생활과 윤리』 교과서(재구성)

[다] 공해 수출이란 석면과 같은 유해 물질을 취급하는 공장이나 기술 또는 전자 폐기물, 핵폐기물 등의 오염 물질을 선진국에서 개발도상국으로 이전하는 국가 간 교역 행위를 말한다. 선진국의 기업들은 최신 기술의 설비는 자국 내에 유지하지만, 섬유, 화학, 금속, 기계 등 오래된 제조 설비들은 개발도상국으로 이주하였다. 이는 개발도상국의 과다한 자원과 에너지 소비에 영향을 미쳤으며, 다양한 직업병과 환경 오염 문제의 원인이 되었다.

—『고등학교 정치와 법』 교과서

[라] 기후 변화는 환경 문제의 전 지구적 성격을 가장 잘 드러내는 영역이다. […] 기후 변화 문제를 해소하려면 기후 변화로 인한 윤리적 문제의 심각성을 깨닫고, 다양한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 개인적 차원에서는 쓰레기와 각종 공해 물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생활해야 한다. 국가적 차원에서는 산림의 무분별한 벌목 금지, 온실가스의 배출 감소 유도 등 환경친화적 정책을 시행해야 한다. 국제적 차원에서는 국가간에 합의한 교토 의정서, 파리 기후 협약 등의 협력을 지속하고, 개발 도상국에서 발생하는 환경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선진국의 지원을 이끌어 내는 등 전 지구적인 상생의 대응 방안을 모색해 나가야 한다.

—『고등학교 생활과 윤리』 교과서(재구성)

[마] 현대의 우리는 한 국가의 시민인 동시에 세계 시민이다. 그리고 세계 시민주의는 이제 세계 모든 국가가 존중해야 하는 보편 가치가 되었다. 오늘날 세계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세계 곳곳에서 긍정적인 협력이 발생하기도 하였으나 다른 한편으로는 환경 파괴, 문화의 상품화와 다양성 훼손, 테러와 전쟁의 확산 등의 문제가 등장하였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구촌 곳곳에서 발생하는 여러 문제들을 자신과 별개의 문제로 보지 않고 국제적인 협력을 통해 다루고 함께 해결해야 할 공통의 문제로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 즉, 특정 국가의 국민이기보다는 세계 시민주의의 관점에서 문제들을 바라보고, 인류의 보편적 가치와 민주적 절차에 따라 해결하려는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하다.

—『고등학교 윤리와 사상』 교과서

▢ 출제의도 및 채점기준

1. 출제의도

· 이 문항은 고등학교 통합사회, 정치와 법 교과서에 나오는 정의의 의미와 실질적 기준에 대한 논의를 기후 문제를 둘러싼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간 갈등에 적용해 분석하고 그 해결 방안을 구조(국제사회/국가) 및 개인의 측면에서 종합적으로 모색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고자 했다.
· 2015 개정 교육과정 고등학교 사회과 통합사회의 성취기준 [10통사06-01], [10통사06-02], [10통사06-03]은 정의의 실질적 기준을 탐구하면서 이를 구체적인 사례에 적용해 보고 다양한 제도와 실천 방안을 탐색할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또한 2015 개정 교육과정 고등학교 도덕과 생활과 윤리 [12생윤06-03]도 국가 간 빈부 격차 등 국제사회의 여러 분쟁에 대한 책임과 기여 문제를 윤리적 관점에서 비판적으로 설명하고 실천 방안을 제시할 수 있는지를 성취 기준으로 삼고 있다.
· 본 문항은 제시문 모두를 교과서에서 발췌함으로써 교과과정 이외의 사전 지식이 없어도 제시문 내용에 대한 분석만으로 답안을 충분히 작성할 수 있도록 설계하였다.

2. 문항해설

환경은 전 지구적 문제로 국제적 노력을 통해 해결해야 하는 과제이다. 기후 문제에 당면하여 선진국들에서는 지속가능한 발전이라는 슬로건과 함께 친환경공정 의무화, 탄소배출세와 같은 정책을 도입하고 있다. 개발도상국들은 환경문제의 중요성은 인정하면서도 그동안 환경 파괴의 주범이었던 선진국들이 똑같은 책임을 개도국에게 부과하여 이제 자원을 이용하거나 낮은 단계의 기술 산업을 통해 경제발전을 하려고 하는 후발 산업화 국가들의 성장 사다리를 걷어차는 것이라고 비판한다. 선진국의 공해기업이 개발도상국에서 공장을 돌리는 것도 기후정의뿐만 아니라 사회정의 측면에서 구조적 불평등 문제로 생각해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내용을 정의의 의미와 실질적 기준과 관련하여 논하고 개인과 국가, 국제사회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대응 방안을 복합적으로 기술하도록 하는 문제이다.

제시문 [가]의 두 지문은 정의의 본질적 의미에 가까운 분배적 정의에 대한 설명을 담고 있다. 법적 정의의 핵심은 평등으로, 실질적 평등에 입각한 분배적 정의가 실현되지 않을 때 사회적 갈등이 발생할 수 있다. 제시문 [나]는 심각해진 기후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여러 국제 협약이 추진돼 왔지만, 현실적으로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간의 이해관계가 충돌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탄소 배출권 거래제는 선진국에 면죄부를 준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온실가스 감축 책임을 두고서도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의 입장이 대립하고 있다. 제시문 [다]는 선진국의 공해 수출 사례를 통해 지구적 차원의 기후정의란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게 한다. 제시문 [라]와 [마]는 기후 변화와 같은 전 지구적 환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세계 시민주의적인 태도로 개인·국가·국제 사회가 모두 참여하는 다층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것을 역설한다. 특히 문제 해결의 대안적 방향을 서술할 때, 분배적 정의에 따른 기후정의 개념을 적용하여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의 국제 협력이 어떻게 이뤄지는 게 바람직한지에 대한 분석을 도출할 수 있다.

각 제시문의 출처는 다음과 같다.

[가-1] 육근록 외, 『통합사회』 (동아, 2021), 165쪽
[가-2] 서범석 외, 『정치와 법』 (지학사, 2023), 13쪽
[나] 차우규 외, 『생활과 윤리』 (금성, 2021), 142쪽
[다] 모경환 외, 『정치와 법』 (금성, 2021), 176쪽
[라] 정탁준 외, 『생활과 윤리』 (지학사, 2025), 139쪽
[마] 박찬구 외, 『생활과 윤리』 (씨마스, 2023), 213쪽

3. 채점기준

[채점기준]

<결과 등급 기준>

· [가]의 두 지문에 제시된 정의의 의미와 실질적 기준에 대한 논의를 [나]와 [다]에서 볼 수 있는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의 갈등 구조와 연결지어 구체적으로 분석하고 있는가?
· [라], [마]를 활용하여 개인과 국가, 국제사회의 복합적 노력이 필요함을 설명하고 있는가?
· 환경문제에 대한 국제적 협력과 실질적 정책 도입에서도 기후정의에 입각해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이 함께 하는 대안을 모색하고 있는가?

<과정 등급 기준>

· [가]의 두 지문의 논의를 바탕으로 [나], [다]의 갈등을 분석할 때:
  - 정의의 본질적 의미에 가까운 실질적 기준이란 어떤 것인지를 설명하면서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의 입장 차를 짚어내고 있는가?
  - 선진국이 주도하는 기후 문제 협약들과 기존의 환경 부담 이전 정책의 문제점을 비판적으로 파악하고 있는가?
· [라], [마]를 활용하여 해결 방안을 기술할 때:
  - 세계 시민적 관점을 바탕으로 개인과 국가, 국제사회의 다층적 협력이 필요함을 언급하고 있는가?
  - 환경문제에 대한 국제적 협력과 실질적 정책 도입에서 선진국이 실질적 평등 원리에 따라 책임과 부담을 지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는가?
  - 개발도상국의 입장도 반영되는 논의 구조를 통해 기후정의가 실현되는 국제적 협력 틀을 대안으로 제시하는가?

<등급 판정 기준>

특상: 위의 결과 등급 기준과 과정 등급 기준을 형식과 내용 면에서 모두 충족하는 경우
상: 결과 등급 기준과 과정 등급 기준을 대부분 충족하였으나 용어의 사용이 정교하지 않고 글쓰기가 명료하지 않은 경우

중: 결과 등급 2개 이상, 과정 등급 2개 이상이 제시되었지만 논점들이 다소 모호하게 서술된 경우
하: 결과 등급과 과정 등급 중 대부분이 모호하게 제시된 경우

<유의 사항>

· 특상의 변별을 위해서는 위에서 설명한 결과/과정 등급 기준을 모두 충족하고 있는지에 근거하여 판단하는 것을 권고함
· 답안에 쓸 수 있는 모든 재료가 제시문에 이미 나와 있으므로, 제시문에 나온 정보들을 통합적으로 사고하여 분석하지 못한 채 기계적으로 내용을 짜깁기하는 경우 낮게 평가
· 해결 방안을 서술할 때, 들어가야 할 내용이 다 들어갔다면 [라], [마]를 적시하지 않아도 상관없음

4. 예시답안

제시문 [가]의 두 지문은 정의의 핵심을 분배적 정의와 평등에 둔다. 분배적 정의는 각자의 자격·상황·책임에 따라 자원을 공정하게 배분해야 한다는 원리이며, 이를 위반하면 갈등이 발생한다. 제시문 [나]와 [다]에서 드러나는 갈등은 기후 변화의 책임과 부담을 둘러싼 국가 간의 불평등한 분배 구조에서 비롯된다. 개발도상국은 산업화를 먼저 이루며 온실가스를 대량 배출해 온 선진국이 더 큰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반면 선진국은 현재 개발도상국의 산업화가 온난화를 가속한다는 이유로 책임을 분산하려 한다. 이는 온실가스 감축 부담이라는 사회적 자원을 '누가 얼마나 부담할 것인가' 하는 문제에서 배분 기준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발생한 전형적 분배적 정의의 갈등이다. 또한 [다]의 공해 수출 문제는 선진국이 자국의 환경 비용을 개발도상국으로 이전함으로써 책임을 회피하고, 환경 위험이라는 부정적 자원을 불공정하게 떠넘긴 사례다. 이는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라는 실질적 평등의 원리에 반할 뿐 아니라, 개발도상국의 필요와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불평등한 배분 구조를 심화시킨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라]와 [마]에서 제시하는 세계 시민적 관점과 다층적 협력이 필요하다. 기후 문제는 글로벌 차원의 협력이 필수적이므로, 국가들은 온실가스 감축과 환경 보전을 공동의 과제로 인식하고 선진국이 개발도상국을 지원하는 상생적 구조를 마련해야 한다. 선진국은 역사적 배출량과 기술력을 기준으로 더 큰 감축 의무와 기술 이전 책임을 지고, 개발도상국은 지속가능한 개발 방안을 채택하며 협력에 참여하는 방식의 비례적 분배가 필요하다. 또한 각 국가가 국익 중심적 시각에서 벗어나 기후 변화를 인류 공동의 문제로 인식하는 세계 시민주의적 태도가 요구된다. 이러한 국제 협력 체계가 강화되고 개인의 오염을 줄이려는 윤리적 소비가 더해질 때 기후 위기의 가속도를 줄여갈 수 있을 것이다.